

與 지지율 확보... '민생행보·극우제동' 통해 반등 모색

국민의힘, 전대 컨벤션 효과 미미
당-정부 간 정책 엇박자 해소 주력
'우파 통일' 등 일부 극우발언 경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3·8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누리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히는 '당과 정부 간 정책 엇박자'를 해소하는 한편, 극우 메시지에 선긋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기·가스 요금 등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김기현 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에서 대학생들의 '1000원 아침밥' 운영 상황을 직접 챙긴 데 이은 민생 행보다.

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를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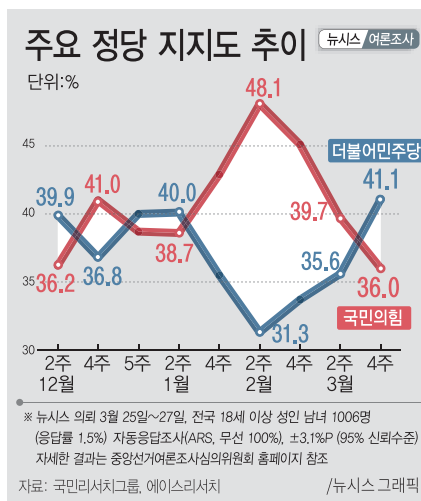
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가 넘거나, 쌀값이 평년과 비교해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농업 경쟁력 저하 ▲쌀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

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 간 협의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도 오는 31일 예정된 2분기 요금 발표를 앞두고 이뤄졌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당과 정부는 정책 엇박자로 인한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시 협의도 예고했다. 당 정



목사의 우파 통일' 발언 등 논란에 당 지도부가 경고장을 보낸 게 대표적이다.

결국 박스권에 갇힌 당 지지율 해소 차원에서 정책 역량은 강화하고,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현안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당 지지율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조사해 29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36.0%, 더불어민주당은 41.1%로 집계됐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2주 전 조사한 정당 지지도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7%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의 경우 5.5%포인트 오른 수치다. 29일 조사에서 양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의당 2.6%, 지지 정당 없음은 18.1%로 나타났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野 '양특검' 이견... 패스트트랙 지정 불발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

정의당 "대장동 특검 우선 논의"
민주당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양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했으나,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틀에 걸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대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 특검'은 민주당안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자고 정의당을 설득했다.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고 의원총회를 가지면서 양특검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30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리고 방금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짓는 것은 정의당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양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지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란 의미다. 정의당은 소속 법제사법위원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들이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양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석의 의석수를 가진 정의당을 설득해왔다.

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바라는 패스트트랙 지정도 가능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기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며 "계속해서 지지부진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임기 내에 완수는 하고 나갈 거라는 큰 시간표는 갖고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논의한 것에 대해 "너무 의아하고 이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특검은 민주당의 요구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고 정의당도 그래서 양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특검 추천 방식 우려 해소를 위해 (50억 클럽 법안은) 정의당 법안으로 신

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제안하고 양보했다"면서 "그럼 정의당이 응당 답하는 것이 순리인데, 국민의힘을 쫓아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 이야기는 특검법과 관련해서 상정 및 심사권한은 법사위에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과 간사에게 적극 노력해보라고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인데 (정의당이) 무엇을 얻어왔다는 것인가"라며 "정의당이 오늘 국민의힘을 만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다시 지켜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던 현실을 타개하고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 오전 간사협의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함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1000원 아침밥' 예산 확대 환영"

김민석 의장 "지자체 참여 유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대학생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1000원 아침밥'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확대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00원 아침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지방대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다. 지역에서 대학마다 재정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0원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지자체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도 보다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들도 참여를 한다면 1000원은 학생들, 기초지자체에서 500원, 광역지자체가 500~1000원, 중앙정부가 1500~2000원인 이렇게 부담의 주체를 늘리고 부담 액수를 확대하면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훨씬 용이하게 참여해서 전국의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와 학교가 나머지 비용을 지불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7억2800만원인 관련 예산을 15억77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한덕수 "5월 초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국무총리>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권고' 전환
확진자 격리 기간 7일→5일 단축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내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은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

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 조치 이후에는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격리 의무와 일부 남은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